데스크 시각

‘나는 부산, 뛰는 대구, 기는 광주’

박 진 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기자에게 있어 부산은 ‘아무리 뭐라해도’ 영화의 도시다. 2001년부터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긴 하나 국제영화제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인지 부산하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다. 매년 부산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 세계적인 스타들이 줄을 잇고 ‘시네마 천국’에 빠지기 위해 국내외에서 20만 여명이 찾는다.

BIFF는 세계적인 영상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부산에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 2011년 숙원이었던 1600억 원 규모의 전용관 ‘영화의 전당’을 건립한 데 이어 영상분야의 3대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를 유치해 영화의 메카로 입지를 굳혔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자의 ‘믿음’은 부산 달맞이 길을 둘러본 후 깨졌다. 화창한 봄날에 찾은 부산은 영화의 도시가 아닌(?) ‘한국의 몽마르트’였다. 30여 개의 갤러리가 늘어선 달맞이 길은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맡기 힘든 문화의 향기가 가득했다.

미술시장 키운 부산비엔날레

이날 맥화랑에서는 정작 고향에선 무명에 가까운 해남 출신 문형태 작가의 전시회를 관람하는 행운을 얻었다. 조선대 미대 출신으로 10년 전 서울로 올라간 문 작가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맥화랑 대표에게 ‘캐스팅 된 후’ 잘 나가는 작가가 됐다.

부산에선 실력 있는 젊은 작가들이 국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우선 맥화랑과 같은 상업 갤러리가 40여 개에 이르고 한해 부산에서 열리는 아트마켓도 2~3개나 된다.

이처럼 부산이 탄탄한 미술 인프라를 갖게 된 건 창설 13주년을 맞은 부산비엔날레의 효과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의 후발주자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영화제와의 시너지 전략을 내세운 끝에 미술의 도시로 변신중이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구 근대골목을 취재하기 위해 들른 대구 중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은 “하루에도 대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수십 여명이 찾는다”며 “특히 광주에서 연락이 올 때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 전의 선교사 주택, 계산 성당 등을 코스로 엮은 근대골목은 광주의 양림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 때문에 지난 2008년만 해도 광주 양림동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의 7대 문화권으로 지정돼 오히려 대구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였다. 잘 보전된 유적과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효과를 내세운 양림동의 청사진은 부러움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중구청은 근대골목에 스며 있는 이야기들을 엮은 스토리텔링으로 매년 전국에서 20만 명이 찾는 브랜드로 키워냈다.

‘밑빠진 독 물붓기’ 언제까지

부산과 대구의 눈부신 성과는 빅 프로젝트들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를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다른 만큼 단순비교는 적절치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을 컨셉으로 한 비슷한 이벤트가 도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 한번쯤 진지하게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불리는 광주비엔날레를 보자.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슈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때 160만 명이었던 관람객은 2012년 69만 명(유료관객 19만 명)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학생단체 관람객들이다. 사실 지금쯤이면 시립미술관과 예술의 거리는 관람객들로 넘쳐나고 미술계 큰손들은 미래의 스타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광주로 몰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미대를 졸업한 청년작가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서울로 창작의 터전을 옮기고 지역의 유일한 아트페어는 적자에 허덕인다. 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지역화랑이 부산 17개, 대구 16개에 비해 2개에 불과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대구에 ‘역전’ 당한 근대골목 역시 마찬가지다. 근대골목이 ‘대구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데 반해 양림동 역사마을은 6년간 3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예산 대부분을 인공시설물과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한 탓이다. 여기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도 ‘돈 들인 공’도 없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예술이벤트의 성패를 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문화적 가치’ 를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관대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기엔 광주가 갈 길이 너무 멀다.

/jhpark@kwangju.co.kr

社 說

재난기금 최하위 광주 지자체의 안전의식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도 모두 확보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지자체의 재난 대비 태세와 안전의식이 타시·도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3823억 원으로 법정 기준(4조1383억 원)을 6%가량 초과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정 기준액 802억 원 중 290억 원만 확보해 누적 확보율이 36%에 불과했다. 이는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34%)에 이어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시·군·구에서는 광주 동구와 광산구가 각 55%, 서구 60%, 남구 67%, 북구 92% 등으로 광주지역 5개 구 모두 법적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군·구는 모두 24곳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광주가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광주지역 지자체가 기금 적립을 미루는 데는 열악한 재정 여건 탓도 있지만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잇따른 대형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하나씩 바꿔가려면 스스로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지자체도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재난관리기금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넘쳐나는 ‘길’ 조성사업 혈세만 축낸다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길’ 조성이 붐을 이루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길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조성된 길은 문화·생태탐방로, 숲길, 해안길, 역사길 등 무려 89곳에 길이만도 1974km에 이른다. 여기에 전남도가 금년부터 2015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450km의 조선수군 재건로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수군 재건로는 구례~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진도~해남 등 8개 시·군을 지나는 길로 특별회계와 도·시·군비 등 39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길은 이순신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한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군사·무기·병선 등을 모으면서 해남 명량대첩지까지 이동한 길이다.

도는 수군 재건로를 지난 2012년 말 개통한 구례~순천역의 119km 백의종군로와 함께 역사·문화·생태 차원에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억6600만 원이 들어간 이 백의종군로에는 지금까지 걷기나 순례답사로 4437명이 찾는데 그쳐 사실상 역사탐방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곳곳에 조성된 ‘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처럼 길이 넘쳐나는 것은 제주 올레길의 열풍에 따라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조성하고 있는데다 안행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별로 ‘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참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하고, 이들 길을 관리운영하는 시·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부담만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길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 계획이나 추진 단계인 경우 철회하고, 시행 중인 사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길 조성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혈세만 축낼 뿐이다.

은펜칼럼

광주 양림동, ‘양림다움’으로 거듭나야

박 홍 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양림동은 광주 근대화의 시작점이다. 많은 문화유산과 이야기들이 있어 광주 최고의 보물창고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이’, ‘왜’ 보물이고, 양림만의 가치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논의나 공유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니 ‘보물’과 ‘가치’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는 같게, 일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각종사업의 이름으로 양림동이 많이 변질되고 있다.

필자는 ‘양림동은 광주 근대건축· 역사박물관이다.’라는 제목으로 컬럼(2011년 9월28일자 은펜컬럼)을 쓴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양림동에 2008년부터 광주시 주관으로‘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다. 1차 사업은 끝나고,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이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형성이 부족하고, 둘째는 설계와 시공발주 방식이 비문화적인 토건국가적· 행정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셋째는 시행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연속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의 부재 등의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 이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안으로 첫째,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글이었다.

그 후 3년이란 세월이 흘려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2차 사업이 끝나고, 3차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양림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재도 어떤 사업은 ‘양림의 가치’, ‘양림다움’의 중요자산을 망가뜨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즉 기존의 마을 흔적을 지우고 대형주차장을 짓는 일,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며 음악가 정율성 생가 골목길과 김현승 시인이 살았다는 주거를 흔적도 없이 없애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들은 ‘양림동을 위하는 일’이라 한다. 어찌해야 할까?

지난 2월부터 8주간에 걸쳐 양림동에서 열렸던 ‘주민디렉터 양성 워크숍’과정에서 희망을 찾아본다. 이는 남구청과 광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많은 지역주민과 문화해설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필자도 참여하여 많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배웠다. 보존과 개발, 옛것과 새것, 사람과 자동차, 골목길과 소방도로, 느림과 빠름, 문화유산 소유주와 관람자, 거주민과 탐방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름도 확인도 했다. 확인을 했으니 곧 대안도 나올 것으로 믿는다. 대안엔 여러 방법이 가능하겠으나 필자는 다음 세가지가 그 시작의 기본이라고 본다.

첫째, ‘양림의 가치’공유와 ‘양림의 꿈’을 제시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주민, 소유자, 각 분야 전문가, 행정 등이 함께하여 마을의 가치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 그간의 사업도 평가해야 한다. 마을의 비전과 목표도 재설정해야 한다. 추진 전략과 기본구상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협의체 구성과 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양림동의 문화유산 대부분이 학교재단, 교회, 기독병원 등의 소유다. 그리고 일부 단체와 개인 소유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소유자의 재산 이전에 광주와 우리 후손들의 중요한 문화자산들이다.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소유자들과 마을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매우 크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도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도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조정자와 감동 역할을 해야 한다. 대안제시와 사후 관리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금년 10월이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다. 앞으로 외지인들이 더 많이 광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양림동은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이자, ‘야외박물관’이다. 이를 지키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은 소유자, 양림동 주민, 남구청,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양림동이‘양림다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無 等 鼓

상위 1%

‘돈이 돈을 버는(Money Makes Money)’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최종 목표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든,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개인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금융기관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는 최근 전세계 부(富·wealth)의 46%를 상위 1%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 세계 백만장자의 숫자는 3168만 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백만장자는 25만 1000 명인데, 오는 2018년에는 79%가 늘어 44만90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즉 100명 중 한 명이 1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일군 백만장자 대열에 서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도 매년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만 6000명에 이른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2년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한 통계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100명 가운데 1.67명 그리고 전남에서는 1.56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억대 연봉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실수령액이 675만 원을 넘는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9%가 백만장자가 아니고, 광주·전남 직장인 중 98.5%가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세상에는 백만, 천만장자 그리고 10억, 100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하다.

많은 연구가 있지만, 사람들이 부자(富者)와 빈자(貧者)로 나누어지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세모의 유병언 전 회장처럼 불법, 편법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기 고

종자가 국가의 성쇠를 좌우한다

이 경 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제3의 침팬지’의 저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명저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는 무기·병균·금속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밝힌 책이다. 이 책은 민족간의 정복과 종속, 대륙간 문명발달의 속도차이, 다양한 문명의 기원에 대한 원인을 ‘총, 균, 쇠’에서 찾고 있다.

지배와 피지배, 선진화된 문명을 결정짓는 ‘총, 균, 쇠’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식량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선행조건이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있게 됨에 따라 농업인, 군사, 부족장 등 지배·피지배 계급이 형성돼 문명의 태동, 무기생산, 전염병 발생과 면역력 강화 등을 초래하고 이를 활용해 타 부족이나 타민족에 대한 정복이 이뤄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화문명, 이집트 문명 등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도 비옥한 토지와 대형 강 등이 있는 농업환경이 유리한 지역이었다. 문명이 발전하거나 최초로 발생한 지역의 선결요건인 농업생산은 농업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이외에도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종자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벼, 보리, 밀 등 식량종자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서 채취한 종자는 생산성, 내병성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내병성이 우수한 종자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근대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미래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류 종말의 위기에 직면하리라는 비관론적 전망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산성, 내병성이 뛰어난 우수 종자개발로 식량생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맬서스의 비관론적 예측도 빗나갔다. 맬서스는 기술진보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최근 종자산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근대적 영역에서 식·의학, 에너지 등 생명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바이오 장기를 위한 동물개발은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대한 전기를 마련했고, 바이오 에탄올용 억새풀 등의 개발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생명공학기술에 기초한 생명산업은 철강, IT산업의 뒤를 이을 것으로 인정될 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생명산업 관련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약 8372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 중이다. 2020년에는 1조7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세계 제1위의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의료시대의 구현을 위해 신약과 의료연구를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지식기반 사회 구현과 생명산업 분야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생명과학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고려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원나라에서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의 의복혁명을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이 한 알의 새로운 종자가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농업분야에서 품종보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문익점과 같은 무임승차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선점하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종자 등 생명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